

교회 대면예배 일부 허용하고 챔스필드 프로야구 직관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실내·실외의 집합인원 제한 해제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 재개

유흥주점 등 10종 집합제한 유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인원도 30% 내에서 허용한다. 방역 패러다임도 기존 '시설 통제' 중심에서 개인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사실상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속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기존 집합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방역 조치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선관위 원칙을 적용, 최고강도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

◇실내·실외의 집합인원 제한 해제=1단계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실내 및 실외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2단계 때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결혼식을 비롯한 종교 모임, 각종 행사, 시합 등이 인원 제한을 받는다. 다만 당분간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사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에 대해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생활체육 동호회 활동·방문판매도 허용=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집합제한'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은 전면 허용된다. 또 스포츠 경기도 수용인원 30% 내에서 관중입장이 허용되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다.

◇중고시설 등 28종 집합제한 해제=중고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 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방역수칙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다만 종교시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해야 하고, 모든 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재개되며,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허용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한다. 시설 종사자도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제한 유지=유흥주점 등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10종은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2단계처럼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 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홀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300인 이상),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오늘부터 유·초·중·고 등교수업 3분의 2로 확대 전남, 전원 등교 '소규모 학교' 기준 300명 내외로 늘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광주가 50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복귀하고 정밀 생활방역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지역 교육 현장도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교들은 12일부터 1단계에 준하는 학교 밀집도를 적용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3분의 2가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밀집도 기준을 '당일 등교학생 수'에서 '동시간대 등교학생 수'로 완화해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을 최대한 늘린다.

특히 유치원은 학급당 15명 이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900명 이하, 중학교는 800명 이하,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 314개 학교 중 88%인 277개 학교는 교육공동체들의 협의와 준비기간(10월12~16일)을 거쳐 모든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학생 800명(중), 900명(초·고) 이상 학교들도 등교수업 확대를 원칙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적합한 등교수업 방법을 적용한다. 초·중·고등학교는 동시간대 등교학생 수 3분의 2 이내에서 '시차 등교', '오전·오후 등교', '학년별 출석제', '격일 등교' 등의 방식을 적용해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을 늘린다.

초등학교는 한글책임교육 및 기초학력 결손 예방을 위해 1·2학년 우선 등교를 실시하며, 유·초등학교의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

60명 이하 놓여준 소규모 학교는 전원 등교하고 그 외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부분 등교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도 밀집도 예외 소규모학교 기준을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하고 학년별 등교 방식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밀집도 완화 지침에 따라 현행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을 유지한다.

다만 밀집도 완화 등 조건을 갖춘 학교들은 교육부의 19일부터 시기를 앞당겨 실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항국 광주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학력격차 해소와 안정적 돌봄을 위해 12일부터 새롭고 도입하는 학사운영 방안이 현장에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현장밀착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책임은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감당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문 대통령, 내일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연다.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각 지역의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 1차 전략회의를 한 지 40일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각 시도의 구상을 살펴본 뒤 창의적이고 사업성 등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구상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법무부 국감...추미애 아들 의혹·서해 피격 사건 최대 쟁점

내일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도마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건 등 양대 쟁점에 대한 여야의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12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과 13일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가 이어지며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 감사에는 추 장관이 직접 출석,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도 높은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도 고인의 형 국감중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부위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NH투자증권 정영재 대표 등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물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이동철 회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여당의 장기 집권을 기원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견배사를 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마치지 못했고, 12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을 놓고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독감 백신 수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0년 공익광고 지원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자리처럼 보여도 2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 번의 배려가 두 사람을 미소지게 합니다.

